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74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정일영 · 전용기 · 이주희
김남근 · 남인순 · 민형배
김 윤 · 오세희 · 임미애
이광희 · 이병진 · 정진욱
박희승 의원(13인)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관리체계의 미비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움.

특히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보완을 통한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산업·기술 혁신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 질서 확립,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조·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운행 의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무면허 운전과 무단방치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30조).
- 라.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결격사유 및 위탁·양도 절차 등 대여사업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마. 주차·충전시설, 수리센터, 보호장구 보급, 안전교육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보험가입 의무, 과징금·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와 교통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수단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충전시설, 보관 및 정비시설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

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고 대여하거나 공익적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인구과밀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인구 밀도, 유동 인구, 교통 혼잡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교통취약지역”이란 제4호에 따른 인구과밀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대중교통 운행 횟수, 배차 간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과 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과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과밀구역 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취약지역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 대중교통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이하 “활성화및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및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보 및 보행자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이용 활성화 및 다른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방안
3. 인구과밀지역에서의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 대책
4. 교통취약지역에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5.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충 방안
 6. 데이터 수집·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 단속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설치 및 주차금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및관리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활성화및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허용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거치시설, 충전시설 및 안전표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구역에 대하여도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구역에는 안전표지 등 조

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및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및 이 법에서 정한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
면허를 보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
출 것
3.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중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전하
지 아니할 것
5.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전하지 아니할 것
6. 지정된 구역 외 개인형 이동수단을 주차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미성년자 또는 무면허자가 개
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이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금 감면, 안전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과 수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충전시설과 수리센터의 안전기준, 설치·운영 방법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험 및 피해구제)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피해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피해구제기금의 설치·운영

2. 공공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마련

3.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률 지원 체계 구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장 및 제2항·제3항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 제고, 이용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보급을 위하여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2. 친환경 배터리, 충전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연구
3. 자율주행, IoT, GP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개발
4. 보행자 보호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첨단 장치 개발
5.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및 승차정원 초과 등 부정이용 차단을 위한 기술 연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의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험·실증사업 지원, 데이터 개방 및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제14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

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사업(이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저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조와 성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18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구과밀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및 이용시설을 확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확보할 것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④ 대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20조(대여사업자의 명의대여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대여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여사업을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여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등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로 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장치 마련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승인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위탁의 절차, 기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사업자가 아닌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또는 존속·신설되는 법인은 종전 대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절차 및 처리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① 대여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상속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해당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제24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① 대여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약관)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계약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관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 체결 전에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약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약관의 작성·신고·고지 및 변경 권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 향상 및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약관의 변경
3.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한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한 경우
5. 제2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0조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와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이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0조(대여사업자의 의무)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제28조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할 것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중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4.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할 것
 5. 개인형 이동수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지를 부착·관리할 것
 6. 이용자에게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에 대하여 안내할 것
 7. 관할 지자체에 운행기록 등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
- ③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충전시설 등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구과밀지역의 대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와 안전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

1. 주차시설 · 충전시설 등 이용시설 현황
2. 대여사업자 및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 등 현황
3.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현황
4.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에 관한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및 대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 · 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료제출 요구)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4. 대여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대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여사업을 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위탁하거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8.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를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경우

1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3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경우

14.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문) 시·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3. 제20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관리 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2.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3.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23조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